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08(금) ~ 2023.09.14(목)

제공일시 2023 09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08(금) ~ 2023.09.14(목)

제공일시 2023 09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유럽연합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2.5% 늘린다, IRA 맞설 그린딜 강화

- 로이터는 유럽의회가 찬성 470표, 반대 120표, 기권 40표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음
- 이번엔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32%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42.5%까지 확대해야 함
- 또, 유럽연합 가입국들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제출되면 2년 안에 승인해야 함
-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통해, 친환경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천명한 '그린딜 계획'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음

(비즈니스포스트, 2023.09.13) 손영호 기자

### 2. 일본,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국가인정 제도 도입

- 일본 정부가 플라스틱 소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만든 플라스틱 용기 등 환경을 배려한 플라스틱 제품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르면 올해 내에 도입할 계획임
- 경제산업성은 이르면 내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만들어 우선 페트병, 세제 용기, 문구 파 일 등을 위주로 기준을 논의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음
- 이어 사업자가 신청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대상으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일반적인 제품보다 환경 영향을 더 고려했는지 심사해, 정부가 인정·표시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이는 플라스틱 제품에 투입된 플라스틱 소재의 양을 줄이고 사용 후 분해·재활용을 촉진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는 취지로, 정부의 인정·표시 제도는 제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유도하려는 것임

(오피니언뉴스, 2023.09.11) 이상석 기자

### 3. G20,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목표

- G20 정상들이 뉴델리에서 이틀동안 열린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선언문에는 국가적상황에 따라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약속은 포함됐지만, 전체적인 화석연료 감축은 포함되지 않았고 감축 비율도 구체적이지는 않음
- 중기적으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를 목표로 세웠으며, 정상회담 외에 미국, 인도, 싱가포르 등은 바이오연료의 세계적인 수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바이오연료동맹 시작을 발표했다
- 이번 동맹에는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UAE 등이 참여했음

(ESGToday, 2023.09.11) Mark Segal 기자

## 1.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본격화, 국토부 SK렌터카 포함 외부사업 4건 승인

-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소속 배출량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밝혔음
- 이날 정부가 승인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사업 등 모두 4건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동안 온실가스를 39만3천 톤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히, 신규 공유 차량을 전기차로 도입하는 SK렌터카와 SK텔레콤의 사업에서 대규모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
- 정부는 SK렌터카와 SK텔레콤의 공유 전기차 도입 사업을 통해, 2033년까지 39만2천 톤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음

(비즈니스포스트, 2023.09.08) 정상유 기자

(한국경제, 2023.09.10) 정지은 기자

(신아일보, 2023.09.09) 서종규 기자

## 2.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온다...금융사고시 경영진 책임

- 내년 중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임
-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
-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음
-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음

(연합뉴스, 2023.09.11)  
심재훈, 임수정, 채세롬 기자

## 3. 온실가스배출권 '이월' 확대...13일 국민참여 공청회/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 늘리고 무제한 이월 허용해야"

- 환경부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간 온실가스배출권 이월 제한 탓에 배출권가격 변동성이 커질뿐더러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 또한 위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변경안은 '이월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됐음
-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4차 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임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유상할당의 무제한 이월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더해 유동성 확보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 연계 요구도 늘고 있음

(메트로신문, 2023.09.12) 김연세 기자

(이데일리, 2023.09.13) 이연호 기자

(이데일리, 2023.09.13) 이연호 기자

### 1. 애플, 캘리포니아주가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보고 지지

- 애플이 스콧 워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밸류체인 전체 온실가스 보고(스코프3 포함) 법안에 대해 애플이 지지의사를 표명했음
- 이 법안은 스코프1,2는 2026년, 스코프3는 2027년 공개의무가 수행되도록 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매출 1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적용됨
- 캘리포니아는 SEC 규정 논의와 별개로, 스코프3 보고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안은 지난 5월 주 상원을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이며, 현재 3번째 독회를 하고 있음

[\(ESGToday, 2023.09.08\) Mark Segal 기자](#)

### 2. SBTi, 신뢰도 제고 위해 기후목표 기준 설정 및 검증 단위 분리

- SBTi는 거버넌스 개선, 무결성 강화, 역량 증대를 목표로 하는 변화의 시작을 발표하여 표준 설정과 검증 활동을 분리할 계획임
- SBTi는 CDP, WRI, WWF, UNGC의 협력으로 설립됐는데, 독립적인 기술위원회를 임명해 표준 설정 절차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함
-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에넬의 CEO였던 프란체스코를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음
- 지난해 목표 설정을 원하는 회사수가 87% 증가함에 따라, 검증 역량을 더 확대할 계획도 밝혔음

[\(ESGToday, 2023.09.14\) Mark Segal 기자](#)

### 3. 에너지 전환 전략 고수하는 BP 임시 CEO

- 버나드 루니 전 BP CEO가 동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의혹으로 갑자기 사임한 가운데, 머레이 오친클 로즈 임시 CEO는 에너지 전환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밝혔음
- BP는 올초 에너지 전환전략을 축소했지만 2030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25% 감축할 계획을 가진 유일한 정유 메이저사임
- 오친클로즈는 간단한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회사 목표는 변화가 없고,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BP 이사회 회장은 새로운 상임 CEO를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Reuters, 2023.09.14\) Ron Bousso 기자](#)

## 1. LS에너지솔루션, 미 캘리포니아 대형 ESS 사업 수주

- LS일렉트릭의 북미 자회사 LSEnergy Solutions(ES)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0MW/400M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함
- LSEnergy Solutions은 고어 스트리트 에너지 스토리지펀드(Gore Street Energy Storage Fund, 이하 GSF)와 '빅 락(Big Rock)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밝혔음
- 빅 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카운티에 200MW/400MWh 규모 ESS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임
- LSEnergy Solutions은 주력 제품인 올인원 '아이온(AiON)-ESS' 137개를 공급함 LSEnergy Solutions은 ESS 공급 외에 유지·보수와 원격 모니터링, 시운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곧 공사를 시작해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임

(더구루, 2023.09.08) 오소영 기자

## 2. SK에코플랜트, 베트남서 폐어망 재활용 공동사업 펼친다/코오롱FnC, 폐의류 재생 '서클러 패션' 도입 첫 발 댄다

- SK에코플랜트와 폐어망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인 '넷스파(NETSPA)'가 동남아에서 공동 추진하는 폐어망 재활용 사업이,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예비사업으로 선정됐음
-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내 어선 어업이 가장 활발한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망을 수거, 기술력을 활용하여 재생 나일론을 생산해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실시함
-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폐의류와 재고의 의류 소재화를 위한 '서클러 패션' 비즈니스 도입에 첫 발을 댄다고 밝혔음
- 코오롱FnC는 지난 해 패션 임팩트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소셜 벤처 '케이오에이(KOA)'를 인수, KOA가 몽골에서 진행한 지속가능 캐시미어 소재 사업에서 착안, 폐의류와 재고를 다시 의류 소재화하는 서클러 패션 확장판을 고안하게 됐음

(뉴스투데이, 2023.09.13) 모도원 기자

(이데일리, 2023.09.13) 백주아 기자

## 3. 'H2 MEET 개막' 현대차·포스코·코오롱에 한화 동참...SK 빠진다

- 현대자동차·포스코·코오롱 등 한국 주요 수소기업들이 국내최대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 2023'에 참가해 비전을 제시함
-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한화가 그룹차원에서 대형부스를 마련했고, 2년 연속 자리했던 SK E&S가 올해는 불참함
- 업계에 따르면, 13~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H2 MEET 2023'엔 18개국 303개 기업·기관이 참가함
- 지난해보다 약 2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수소 생산 △수소 저장·운송 △수소 활용 등 총 3가지 분야에서 기술력을 뽐냈음
- 국내에선 주요그룹들이 수소사업 관련 계열사들과 함께 공동 부스를 마련함

(신아일보, 2023.09.12) 장민제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9.08(금) ~ 2023.09.14(목)

제공일시 2023 09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비용 상승 때문에 비상 걸린 미국 해상 풍력

(인팩트는, 2023.09.13) 홍명표 기자

-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 미 에너지부(DO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월 말까지 총 17기가와트(GW)가 넘는 풍력 발전 공급 계약 27건이 체결됐다고 함
- 이렇게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공급 병목 현상, 높은 금융 비용 등으로 많은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구매 계약을 취소했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최신 보고서는 밝혔다
- 일부 개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요건을 완화하도록 미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 세계 최대 해상 풍력 개발업체인 덴마크의 오스테드(Orsted)는 지난 주 IRA에 따른 미국 보조금 확보에 대한 장벽과 치솟는 이자율 및 공급망 지연으로 인해 3개 프로젝트에 23억 달러(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특히 미국의 IRA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국산 장비로 건설되고 저소득층 지역 사회에 위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으로 인한 개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조항은 청정 에너지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혜택의 40%를 취약 지역에 제공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정전환'을 위한 '저스티스 40'의 핵심사항임
- 보조금은 각각 프로젝트 비용의 10%에 해당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IRA의 기본 30% 보조금에 더해 청구할 수 있어 총 보조금은 최대 50%까지 가능함
- 그러나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해외 장비와 자재에 의존하고 미국 연안 해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난관에 부딪힌 상태임
- 실제로 미 에너지부의 최신 보고서가 밝힌 비용 상승은 심각함. 풍력 발전 비용이 2014년 이후 약 50% 감소했으나, 최근 업계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비해 비용이 11~20%, 일부 경우에는 30%까지 증가했다
- 지난 4월 투자은행인 라자드(Lazard)의 분석에 따르면, 풍력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총 수명 비용을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발전량과 비교하는 균등화에너지비용(LCOE)은 메가와트시(MWh)당 72~140달러(약 9만원~18만원) 수준임
- 이런 비용 수준은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경우 24~96달러(약 3만원~12만원), 육상 풍력의 경우 24달러(약 3만원), 복합 사이클 가스의 경우 39~101달러(약 5만원~13만원)에 비해 현저히 비쌌. 복합 사이클 가스는 가스와 증기터빈을 함께 사용하여 기존의 발전소보다 같은 연료에서 최대 50%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임.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폐열로 증기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원리임
- 또한 도매 전기가격과 비교해봐도 비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도매 전기 가격은 뉴잉글랜드에서 평균 약 92달러(약 12만원), 뉴욕 90달러(약 12만원), 펜실베이니아 서부에서 워싱턴 DC까지 이어지는 PJM 웨스트 허브가 평균 83달러(약 11만원)임
- 해상 풍력 개발자에 따르면 1메가와트(MW)는 미국 내 약 1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지만 풍력은 간헐적인 발전 특성상 1메가와트로 약 5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